

“문화수도 걸맞는 건축물이 필요하다”

심의 기준·경관 조화 여부 평가 등 제도 마련 절실

광주공원 앞 AMT 조성사업 제도 보완 목소리

문화수도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대한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건축물의 경우 디자인,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문화수도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토지소유주, 건축주 등이 경관을 도시 전체의 자원이자 광주 정체성을 정립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 시는 별다른 기준 없이 건축법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상위법률과 중앙정부부처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 역시 총칙, 위원회 운영 등만을 간략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해 건축물 심의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사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건축물심의기준’을 제정, 건축물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등 선진국 대도시들이 건축물을 하나의 도시 자원으로 삼아 설계, 건축, 준공 이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민간 건축물 신축 시 문화수도라는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 색채, 주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설계 공개경쟁, 시민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디자인 우수 건축물에 대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지원 체계 도 마련, ‘아름다운 건축’을 시가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비와 시비 290억원을 투입해 광주공원 앞 주차장에 ‘미디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 조성사업’부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AMT(Art Media Technology)는 미디어아트 관련 예술과 기술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와 교육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융·복합센터다. AMT가 들어설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천, 광주문화재단, 광주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시는 이달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설계공모에 나서 오는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AMT가 들어서는 공간이 공원 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구도심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일제강점기 사정 시장이 자리했다는 점에서 자초자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억9천만원

광주 가구당 자산 ‘광역시 꼴찌’…울산 4억625만원 1위

광주시 가구당 평균 자산이 광역시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광주시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9200만원으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이 가장 많은 광역시는 울산(4억625만원)이었다.

광주시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은 4948만원으로 광역시 평균과 같았다.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이 가장 많은 광역시는 역시 울산(5975만원)이었다.

전남도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6586만원으로, 9개 광역도 중 전북(2억5546

만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당 평균 자산이 가장 많은 광역도는 경기(4억1393만원)였다.

전남도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은 4272만원으로 충북(4240만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이 가장 많은 광역도는 역시 경기(5474만원)이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낮고,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 마스터대회 일정 변경

선수권대회 종료 후 1주일 지난 8월 5~18일 개최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18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동호인 참가 경기인 마스터스대회 일정을 2019년 7월 29일~8월 11일에서 8월 5일~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애초 엘리트 선수가 출전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28일)가 끝나자마자 개최하기로 한 마스터스대회를 FINA가 1주일 준비 기간을 두고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FINA 마스터스위원회는 지난 12일 대회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광주를 방문해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계획과 이에 따른 경기운영 및 선수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스터스대회 참가자들의 선수촌 이용을 최대한 늘리고 경기장과 훈련장의 추가 건설 없이 마스터스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경기·훈련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수권대회 종료 후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대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조직위와 FINA는 마스터스대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준비·운영과 더 많은 참가자 유치 등을 위해서는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마스터스대회 기간이 조정됐으나, 경기가 열리는 전체 기간은 총 31일로 변함은 없다.

/오광록기자 kroh@

‘군인 일과 후 외출’ 5월부터 시범적용

군 당국은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군 부대 밖 외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이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 최전방 GOP(일반전초) 지역의 제초 작업을 비롯한 부대 제설 및 청소작업을 내년부터 민간인력에 시범적으로 맡기고, 2020년부터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수행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이들과 간담회를 하고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병영 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외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 김정은 베이징 방문…북·중 관계 회복되나

북한 최고위층이 26일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복원의 흐름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편에선 최근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온 북한이 지도자의 방중을 과거처럼 비밀스럽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다면 사전에 공개하고 항공편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영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신 중이어서 항공편보다는 열차를 선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정 제1부부장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바 있다.

북한 최고위층이 방중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냉랭해진 양국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중관계 복원은 양국이 모두 원하는 바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북한과 중국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연합뉴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탄 것으로 보이는 특대형 메르세데스-벤츠가 2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베이징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외신은 북한의 최고위급 사절단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방문 열차가 이날 오후 베이징역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靑 “북·중 관계개선은 긍정적 신호”

청와대는 2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 설과 관련,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북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예의주시했다”며 “실제 베이징에 어느 분이 가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방중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방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중 인사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그의 여동생 김영정 당 제1부부장 또는 최룡

해 당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방중 인사 신원에 대해 중국 측에 문의해 둔 상황이나”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파악하더라도 먼저 공개할 수 없다”며 “양국 간 외교적 전례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자체가 평상시 상황을 초월한 건데,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당원명부 유출 및 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중앙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시당에서 벌어진 민주당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이의 불법적 활용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명백하게 뒤흔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중앙당의 작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통해 국정농단, 공권력의 사적남용과 관권선거 개입에 준엄한 철퇴와 심판을 내리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복원과 진전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 일각의 정치보복 운운하는 볼멘소리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군색한 자기방어에 불과하지만, 내로남불과 자기편 감싸기라는 비판 앞에 민주당 역시 스스로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이며, 과정의 공정성이다. 국가권력의 사적남용과 불법적 정치개입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촛불혁명 정신이며, 5·18 광주정신이다.

광주시당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실무자가 제명된 상황이고, 당원명부 불법유출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방치하고 시간을 끄는 중앙당의 저의가 무엇인가?

대통령 홀로 고군분투하고, 대통령의 인기에 기댄 채 제 역할 못하는 여당의 모습을 언제까지 봐줘야하는가? 지리멸렬한 야당 때문에 반사적 지지를 받는 여당이 스스로 과감하게 혁신하지 못하면 당원들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평범한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가?

안이힘은 위기를 부르고 단호한 혁신 없이는 아반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당 내부의 작은 문제라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보고 내 눈의 들보는 작게 보는 식의 행태야말로 적폐다.

민주당 내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과감하게 도려내는 음참마속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하고 신뢰하는 여당이 될 수 있다. 촛불혁명 민심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군분투에 부합하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넘어 우리 정치와 사회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의 적폐청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구태를 벗어던지는 촛불혁명의 제 2단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당은 광주시당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사태를 작은 일탈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부터 고만한 고통과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와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후보에 대하여 예비후보 사퇴 등 당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과 엄중조치를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